

균형발전 예타면제사업 신속 추진을

전북연구원, 새만금 국제공항·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등 사업별 추진과제 제안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이슈브리핑(190호)을 통해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된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이하 상용차 산업혁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이하 예타면제)의 신속한 추진과 사업별 추진과제를 제안했다.

연구책임 맡은 김상엽 박사는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 산업혁신사업'을 예타면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라북도가 대도약하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정된 2개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약 2조 8천억원, 부가가치 약 1조원, 고용창출이 약 1만 7천여명으로 분석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예타면제사업의 경제적 효과 및 지역 사회 파급효과는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이 산업과 관광이 복합된 글로벌 투자 중심지로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 및

지원하는 필수 인프라 사업으로 국가적으로 중박이나 선택사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 용역에서 충분한 항공수요와 타당성을 입증하였고 급변 예타면제사업 선정은 전북권 국제공항을 조속히 갖출 수 있게 되어 전라북도가 개발 여건의 판을 바꾼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예타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들이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사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정 사업비 확보와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강조된다. 이에 사업별 4대 핵심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연계 교통망 구축 ▲거점 지역항공사 육성 ▲중단거리 국제노선 선점 ▲특화전략 마련(MRO, PAV 항공교육, 동북아 관광허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공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38조에 의거하여 공항개발에 따라 반경 40km 범위 내에

인프라 사업을 확충하게 되어 있어 연계 추진의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외 약 11.3조원의 사업을 연계교통망 시설의 사업으로 거론하였으며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으로 전라북도가 새만금 신항만, 철도(새만금항~대야)와 함께 명실상부한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 완성으로 새만금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부상하는 핵심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내다봤다.

또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함께 저비용항공사(LCC)를 비롯한 지역거점 항공사 육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전국적으로 7번째 저비용항공사(LCC) 국제항공운송면허 신청이 과열되는 가운데, 다행히도 새만금 국제공항은 기 설립된 지역항공사가 있기 때문에 육성이 용이하고 국제노선확보가 유리하므로 지방공공으로서 경쟁력 확보가 수월하다고 말했다.

'상용차 산업혁신 사업'은 ▲혁신

성장사업단 구성 ▲규제자유특구 지정 ▲차세대 미래형 자동차(수소·자율주행, PAV 등) 대비 ▲5G/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지훈 박사는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산업 규제에 막히는 어려움이 있다며 혁신성장사업단을 구성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단 내 도내기업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받아 개발기술의 제표화,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용차 국외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획기적으로 추월하기 위해서는 수소차, P2C, 미래형 개인용 항공기(PAV) 등도 검토 필요하며, 특히 최근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새만금 공항 건설로 인해 이 같은 사업의 추진 여건이 개선되었다는 설명이다.

김선기 전북연구원 원장은 "그동안 교통수요 및 경제성 논리에 의해 지역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어려운 가운데 선정된 2개의 예타면제사업이 글로벌 공공인프라 구축과 전북산업체질 개선의 기폭제로 전라북도 대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제19회 졸업식이 지난 31일 학교 교정에서 개최됐다.

'빛나는 졸업장을 따신 여러분께'

전북도립여성중고 19회 졸업식 개최

성인여성들의 꿈을 실현하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장 이영희)의 제19회 졸업식이 31일 학교 교정에서 개최됐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졸업생 63명(중26, 고 37)이 영광의 졸업장을 받았으며, 학교장상(2명), 도지사 표창(2명), 교육감상(2명), 도의회 의장상(2명), 동문회장상(2명) 등 119명이 수상의 기쁨을 맛봤다.

3년 종합 학업성적 최우수자인 고3 김현남(69), 중3 안정숙(62)씨는 영예의 학교장상을 수상했으며, 3년 동안 매학년 개근한 성실학과 13명이 개근상을 받는 등 2018학년도 제19회 졸업생 모두가 성인여성의 산실인 도립여성중고 배움의 화로를 뜨겁게 달군 장본인들이다.

이번 졸업생은 42세의 최연소 학생(고3 장순희)부터 84세의 최령자 학생(중3 양계남)에 이르기까지 배움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해 육과 열정으로 학구열을 불태워 빛나는 졸업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이번 제19회 졸업식까지 총 1,383명(중 715, 고 668)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김진성 기자

태권도진흥재단·태권도원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지난해 12월 구축한 재단 및 태권도원 웹사이트에 대한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 품질인증을 취득했다.

재단 및 태권도원 웹사이트는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HTML5를 기반으로 구축된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서도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대비 효과가 강한 색채를 사용하고, 그림이나 사진에 대한 대체 텍스트도 제공하고 있다.

재단 이상욱 이사장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재단 및 태권도원 웹사이트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 및 태권도원 웹사이트에 대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2020년 1월까지 유효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예타면제 축하 플래카드 걸린 전북도청. 지난 31일 전북도청 공영장 건물에 예비타당성 면제를 축하하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 전북대도약의 길, 하늘길이 열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김중회 "한농대 분할, 하늘 두 쪽 나도 있을 수 없어"

"농식품부, 멀티캠퍼스 조성 용어 즉각 폐기해야" 전북혁신도시 해체하려는 공작으로 간주할 수밖에"

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 분할 반대 촉구 기자회견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데 이어 이번에는 한농대 분과가 있는 전북도에서 두 번째 회견이 진행됐다.

국회 농해수위 김중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이 지난 3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농대(한국농수산대학) 멀티캠퍼스 조성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되는 한농대 분할 음모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반대의 입장을 확실히 했다.

김 의원은 "한농대 분할의 음모가 모라모라 피어오르는 '멀티캠퍼스(복수의 캠퍼스)조성'이라는 용어를 즉각 폐기할 것을 농식품부에 촉구한다"며 "한농대가 추진중인 발전방안 연구용역도 전주 분 캠퍼스 확대 강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용역 자체는 원천무효일 것이며 농생명융합도시인 전북혁신도시를 해체하려는 공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한농대 허태웅 총장으로부터 '한농대를 쪼개 타 지역에 제

2-제3의 캠퍼스를 짓는 일'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한농대가 자체적으로 멀티캠퍼스 추진을 위한 용역비를 책정해 왔었고 또한 경북의 성과 경남 합천의 한농대 유치선언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한농대 총장의 말을 백프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모든 상황은 농식품부와 한농대가 제공했기 때문에 원인제공자인 농식품부 장관과 한농대 총장이 직접 나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한농대 분할은 없다'고 한농대 발전방안의 시작과 끝은 분과 캠퍼스 확대 강화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 장관과 허태웅 총장의 공식선언이 있을 때까지 상임위 활동은 물론 전국의 농민단체와 연대해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반드시 분할 음모를 분쇄해 내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한농대 분할 시도는 노무현 대통령의 분권정신을 전전 부정하는 적폐적 발상이다"며 "노무현의 직통이라는 민주당 소속의 현역의원 이 이러한 음모를 추진한다면 민주당 자체가 도민들의 존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한농대 분할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민주당 전북도당,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캠페인과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해 위문 행사를 가졌다.

지난 31일 열린 이번 행사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당 소속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및 당직자 30여명이 참여해 전주 신 중앙시장 일원에서 펼쳐졌다.

이날 장보기 캠페인 행사에 앞서 안호영 도당 위원장은 신 중앙시장 상인회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서민경제 살리기 실천 의지를 담은 민주당의 입장과 의지를 전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 시장 일원에서 장보기를 실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주 신 중앙시장 상인들과 반봉현 대표는 "앞으로도 서민을 위한 정책과 전북도민들에게 행복지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장보기 행사를 마친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후에는 '전주사람의 집'을 방문해 전통시장에서 직접 구입한 찹쌀 120kg을 전달할 위문 행사도 병행했다. /김진성 기자

'김경수 실형' 성장호 탄핵 예고

민변, '사법농단 관여 의혹' 임성근 부장판사 등 10명 명단 발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사법농단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 10명에 대한 추가 탄핵소추를 31일 제안했다. 민변은 '드루킹 댓글' 등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향후 탄핵소추 명단 포함을 예고했다.

민변이 함께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시국회의)는 지난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탄핵소추 대상 법관 명단을 발표했다.

고등부장판으로는 임성근·신광렬·조한창·이진만 부장판사와 윤성원 인천지방법원장이 포함됐다.

시국회의는 "임 부장판사와 신 부장판사, 조 부장판사는 서울형사수석부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등으로 재직할 당시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재판 개입 지시를 받고 이를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한 중간 연결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법원장과 이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와 양형위원회에서 중책을 맡아 통진당 TF 등 주요 회의에서 지휘부 역할을 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휘 하에 벌어진 사법농단에 결과적으로 가담·협조한 셈이기 때문에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시진국·문성호·김종복·최희준·나상훈 법관이 이름을 올렸다. 문건 작성 등에 가담한 횡수가 상당하고, 현재기밀·수사기밀 유출을 통해 향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국회의측의 설명이다.

송상고 민변 사무총장은 "최근 사법농단의 실무지였던 임종현과 정점인 양승태가 구속, 수사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사법농단 과정에서 주어진 직분을 어진 무수히 많은 판사들이 책임지지 않고 법관으로 남아 재판을 하는 상황이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법관 6명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제안한 데 이어 추가 탄핵 대상 10명에 대한 소추제안을 발표하게 됐다"며 "탄핵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국회는 더 이상의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사법 적폐 법관에 대한 탄핵 조치를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지난해 10월30일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인·정다부 법관을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헌법 65조는 법관 등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에서 재직 의인 3분의 1 이상 발의에 재직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시국회의는 "향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명대 전 대법관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해당 공소장을 토대로 3차 명단 작성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며 "3차 명단에는 법원행정처 관계자, 일선 법원의 수석부장 등 사법행정라인 외에도 성장호 부장판사, 김연학 부장판사 등 재판장급 판사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부터 드루킹 김모(50)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았다.

그는 반년에 걸친 심리 끝에 지난 30일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등업무방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시국회의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할 당시 신광렬 형사수석부장에게 영장관련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법농단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다. /뉴스

'김경수 재판 판사 전원 사퇴' 청원 하루만에 17만여명

▶바로접속합니다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관련해 해당 재판을 한 판사들의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17만여명이 동의의 서명을 남겼다.

지난 30일 김 지사 판결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동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횡단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고 비판했다. /강석훈 기자

1월 31일자 15면 '무진장축협 결산총회'에서 '교육 지원 사법비 집행내역'을 보면 ▲조합원 복지증진비 지원=3억9700원(경조비, 각종공제지원, 조합원 자녀 장학금지원) ▲조사연구비 지원=8000원(한우 기초,활용,고등, 선형심사 등록비) ▲영농자재지원비 =2억8600원(정액보관고, 파리아, 출하장려금, 운송료, 각종지원) ▲유류지원비 =2600원(한우농가 출하 유류손실 지원) ▲교육사업비=2700원(한우농가 집합교육 및 축산종사자 교육) 등으로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김중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31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한국농수산대학 분할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